

이산가족 실태 통일부만 보유...지자체 지원 난항

6·25전쟁 74주년

〈하〉정부-지자체 협력 필요

매일 현황 집계 불구 거주지 등 세부 내역 일체 비공개 "실태 파악 통한 원조 활성화 위해 협조 체계 구축해야"

통일부가 매일 이산가족(실향민) 현황을 집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에 세부 거주지역 등 관련 내용이 수십년째 공개되지 않고 있다. 이 탓에 남북 관계가 얼어붙은 상황에서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이산가족 지

원 사업을 펼치려 해도 실태를 몰라 추진을 할 수 없어 협조 체계 구축 등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일 통일부 등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대한민국에 거주하면서 자신을 이산가족(실향민)이라고 신청한 이들 중 생

존자는 3만8천491명이다. 이 가운데 광주·전남지역 거주 인원은 각각 367명·573명 등 총 940명이다. 다만 통일부는 신청 인원의 거주지를 전국 17개 시도 기준으로만 집계, 공시할 뿐 세부 거주지 등은 보안상의 이유로 광역·기초 지자체에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에 일선 지자체들은 "이산가족 지원 조례를 만들고 관련 사업을 펼치려 해도 현황을 몰라 할 수가 없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실제 광주·전남지역에서 이산가족에 대한 사업 및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 지

자체는 광주 남구와 전남도 뿐으로 파악됐으나, 이마저도 지원 대상의 실상을 몰라 한계에 부딪치고 있다. 나머지 지자체와 시·군 중 대다수는 관련 지원 조례조차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지난 2019년 이후 중단된 이산가족 교류 사업을 지자체 차원에서 펼치려고 해도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 2019년부터 올해 4월까지 정부 차원에서 진행한 이산가족 교류 활동이 생사 확인, 서신 교환, 방남·방북·화상 상봉 모두 0건에 그쳤던 반면, 같은 기간 민간에서 생사 확인 3건, 서신 교환 28

건, 상봉 1건의 활동이 이뤄졌다. 남북 관계가 좋지 않음에도 이산가족 교류가 이어지고 있는 것은 다행이나, 문제는 전체 생존자 수에 비해 교류 활동이 턱없이 적다는 점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교류 활동이 끊긴 이산가족의 시름은 날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광주지역에 거주하는 한 2세대 이산가족은 "북쪽에 있는 이웃사촌들의 소식을 전혀 듣지 못하니 기다리고 있지만, 감무소식인지 오래"라며 "정부 기관도 그렇지만, 지자체의 이산가족에 대한 관

심이 너무 없는 것 같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한 지자체 관계자는 "현재 1세대 이산가족 대부분이 고령으로 추정된다"며 "지자체 차원에서 기념행사를 추진하려고 해도 관내에 거주 중인 이산가족을 파악할 수가 없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속사정을 털어놨다. 이와 관련 통일부 관계자는 "이산가족 신청자의 정보는 관련법상 공개가 불가능하다"며 "만약 행사나 사업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대한적십자사나 이북 5도위원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나마 가능하다"고 밝혔다. /주성학 기자



요양보호사의 날을 맞아 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 광주지부 관계자들이 1일 광주시의회 1층 시민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처우 개선과 호봉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정은정 기자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호봉제' 도입해야"

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 광주지부 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 광주지부는 1일 오전 11시30분 광주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을 위해 호봉제가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요양보호사의 날을 맞아 전국에서 동시에 진행된 이날 기자회견에서 노조는 "우리나라 요양보호사 수는 65만명에 육박하고 있으나,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로 인해 공급이 돌봄의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최근 보건복지부는 2027년이

되면 7만명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부족할 것이라 전망을 내놨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조는 "노인의 안전한 돌봄과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을 위해 다른 사회복지영역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처럼 호봉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경력과 전문성을 인정하는 호봉제를 통해 더 좋은 돌봄 서비스가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은정 기자

"현재·대법원 광주·대구 이전 법안 환영"

각 지역 변호사회, 공동 성명 발표 광주지방변호사회와 대구지방변호사회가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발의한 헌법재판소 광주 이전과 대법원 대구 이전을 각각 골자로 하는 헌법재판소

법 개정안과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양 변호사회는 1일 공동 성명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광주 이전, 대법원의 대구 이전 법안 발의를 광주·전남, 대구·경북의 1천만 시민과 함께 적극 환

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대검찰청 등 국가의 중요 법조기관이 서울에 집중돼 재판 업무뿐만 아니라 사법 서비스의 지역적 불균형이 심화돼 왔다"며 "수도권 중심의 사법체계 개선과 지방분권 강화 일환으로서 현재와 대법원의 지방 이전은 전부터 논의돼 왔으나 이번이 무산됐다"고 설명했다. /안재영 기자

'강제추행' 황체어 펜싱 국가대표 전 감독 '유죄'

항소심, 1심 무죄 파기 벌금 500만원 선고...대법원 상고 중

경기보조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황체어 펜싱 국가대표 전직 감독에게 항소심 법원이 유죄를 선고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2부(김영아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황체어 펜싱 국가대표 전직 감독 A(6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국가대표 감독에 재직 중이던 지난 2020년 8월 여성 경기보조원 B

씨를 해남군 합속훈련지 호텔 주차장에서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공사사실에서 A씨가 B씨에게 성추진심을 유발하는 발언을 했고 B씨의 신체 일부를 수차례 접촉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물적 증거가 없고, B씨가 여러 선수들에게 피해 사실을 알린 시점 등이 일관적이지 않아 신뢰하기 어렵다고 봤다. 특히 법정 증인으로 출석한 선수 C씨가 "합속 훈련 해산 전날 B씨와 다른 선수들이 'A씨를 성추행범으로 묶어서 감독직에서 내리자'고 말했다고, 카카오톡으로도 관련 대화를 했다"고 증언

한 점을 고려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B씨가 피해 사실을 알린 시기에 오류가 있어도 진술 전체를 배척할 정도는 아니고, 내용이 일관적이라는 점에서다. 특히 B씨의 무고 혐의 수사 과정에서 C씨가 경찰에 'A씨가 무서워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진술서로 작성했다'고 밝힌 점도 유죄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항소심 재판부는 "업무상 밀접한 관계에 있던 B씨를 추행한 것은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안재영 기자

5·18 부상자회, 조규연 회장 선출

올해 들어 수차례 정기총회가 무산돼 공식이었던 5·18민주화운동 부상자회(이하 5·18 부상자회)의 신규 집행부가 꾸려졌다. 1일 5·18 부상자회에 따르면 전날 오후 광주 서구 5·18기념문화센터 2층 대동홀에서 정기중앙총회를 열고 조규연(사진) 회장을, 이지현·최창수 부회장, 김광호·김옥채 감사, 조상현·김점중 외 8명의 이사를 선출했다. 앞서 5·18 부상자회는 지난 3월 2일부터 총 4차례에 걸쳐 신규 집행부를 구성하기 위해 정기총회 및 임원선거를 진행했지만 '정족수 미달'로 무산됐다. 그동안 5·18 부상자

회는 회원 간 갈등과 국가보훈부 정기감사에서 드러난 국가보조금비리 등으로 내홍을 겪어왔다. 새 집행부의 임기는 오는 2028년 6월까지 4년이다. 조규연 신임 회장은 "5·18 부상자회가 다시 오월 단체의 대표성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단체에 불거진 문제를 바로 잡아 정상화에 힘쓰겠다"며 "앞으로도 오월정신 계승과 대동세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는 일꾼이 되겠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주성학 기자

사고 후 음주측정 거부 60대 입건

사람을 차로 치고 경찰관의 음주측정도 거부한 60대가 입건됐다. 1일 광주 광안경찰서에 따르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60대)씨를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9시 50분께 광주 광산구 장덕동 한 삼거리 인근에서 차를 몰다 자전거 도로에 있던 B·C(각각 10대)군을 친 협의를 받는다. 또 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사고로 B·C군은 부상을 입고 소방당국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윤근 기자

60플라워

Flower

축하화환 3단 근조화환 3단

전국전지역6만배송 (기타낙후지역 배송비 추가요금발생)
Tel. 010-9984-0151 동협 박배성 302-0316-649511

다가치키움, 돌봄 플랫폼 서비스

내·함께 빛나는 기획도시 광주

찾아가는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보미와 함께 하세요

아이돌봄서비스란?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서비스입니다.

대상	생후 3개월 이상 ~ 12세 이하 아동
정부지원	소득기준에 따라 차등 지원
양육공백기준	맞벌이, 한부모, 장애부모, 다자녀, 다문화, 아동학대 피해위기 가정, 기타 양육부담가정
서비스 유형(기준중위소득)	가형(75%이하), 나형(120%이하), 다형(150%이하), 라형(150%초과)
시간제서비스	연 960시간 / 1회 2시간 이상 신청
영아종일제서비스	월 80시간~200시간 / 1회 3시간 이상 신청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1회 2시간 이상 신청

대표번호 1577-2514 가까운 센터로 자동연결 홈페이지 <https://gj-idolbom.or.kr>

광주광역시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Gwangju Metropolitan City Child care Wide Area Support Center